

오피니언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국령애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은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 먹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야 한다. 만드는 사람은 사용하는 식품재료의 이력을 관리해 먹는 사람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먹는 사람은 음식을 편하고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첨가물의 독성과 폐해도 알아야 한다.

가공식품, 첨가물에 맡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맛은 화학조미료에게, 꿀은 양자에게는 소소빈산에게, 변색방지는 산화방지제에게, 새콤한 향취는 삼미료에게 맡긴다. 사카린, 스테비아, 감초 같은 감미료는 염분을 그대로 하면서 짠맛을 줄인다.

결국 혀가 착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짠맛을 줄이기 위해 넣은 감미료의 단맛에 끌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염분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의 저자 아베 쓰카사는 가공식품의 거짓과 속임수를 알아낼 수 있는 첨가물 분류표를 제시했다.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을 선정해 표로 만든 것이다.

2006년 9월 7일은 ‘식품에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모두 표기해야 한다’는 즉 ‘식품완전표기제’가 전격 시행된 날이다. 우리나라가 공식품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원료를 다섯 가지만 기재하면 표기 의무는 더하는 것이다. 일괄표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자들이 편법을 쓰도록 방지해 왔던 것이다. 또 첨가물 남용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반제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기 있었다. 예를 들면 모조간장을 사용한 불고기 양념에는 첨가물 표시가 전혀 없다. 간장 맛을 내는 조미료에는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가공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했더라도 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한결같이 깨끗하고 신선해 보이는 온갖 포장제조소들, 차야암 소산나트륨이라는 살균제를 사용했는데도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완전표기제가 시행되었다.

일본의 가공식품을 보면 사소한 원료 하나도 모두 표기되어 있다.

편리하고 윤락한 생활 뒤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오늘날 우리가 손쉽고 편리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첨가물을 덕분이다. 이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첨가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격은 비싸지고 모양이나 보존력은 더 떨어지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몇 배가 더 들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식품장에서 식품을 고를 때 포장 뒷면의 표기 내용을 꼼꼼히 읽고 구입 하자.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되도록 가공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자. 사용 재료가 빽빽하게 많이 들어간 식품보다는 가급적 적게 들어간 식품을 선택하자. 나열된 첨가물 사용량은 가공의 정도와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가격으로 판단하지 말자. 싼 게 비지떡이라 하지 않던가.

〈사회적기업 콩새미 대표·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명 제자들과 만들었던 차회, 단신계(茶信契)의 계칙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곡우에 차잎을 따서 1 균을 만들고, 입하에 입차를 따서 떡차 2 균을 만든다. 이 일차와 떡차를 음내에 들여보내 인편을 찾아 큰아들 유산에게 부친다.’

다산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구강포나루에서 한강나루까지 1년 먹을 차를 공급했던 것이다. 자신이 먹는 차가 유배지 강진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칙을 만들었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에 앞서 어떤 방법으로 만든 것인지를 꼭 알아야 한다. 몇 년 전 TV 광고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하면서 마치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것처럼 고추장 광고를 했다. 정보 공개가 가장 뒤쳐진 산업이 식품산업이 아닐까.

종교칼럼

흔한 것의 소중함



박덕규

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흔히 드러나는 것 이 있다. 너무나 흔하여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 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일월의 밤음, 땅의 바탕, 공기와 물, 풍운으로 등이다.

그 중에서도 공기와 물을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자. 공기와 물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흔하고 언제나 당연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고 함부로 하여도 항상 우리 곁에 변함없이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공기와 물이 아직도 예전처럼 흔하다 흔한 것이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언제까지 들이쉬며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수강산인 우리나라에서 물을 든 주고 사먹을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

는가.

공기와 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당장 불편해지는 전기는 어떠한가. 얼마 전 발생한 정전 대란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치르는 많은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당연히 주어지는 혜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다. 물질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전기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

소중한 것을 받거나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마땅히 감사하고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게 된다. 실상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원인 공기와 물, 전기 등을 흔하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모르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겠다. 흔하지만 참으

로 소중한 것이기에 감사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공기도 물처럼 돈 주고 맑은 공기를 사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원불교에서는 천진은·부모은·동포은·법률은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사운(四恩)이라 하고 이 사운은 우리의 삶에 있어 있어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리에 근원하여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에서는 살아나(살립·아낌·나눔) 운동을 봉공회와 여성회 등을 통해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봉공회는 바자 등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고, 여성회는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과 남은 음식물 활용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삶이나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흔하고 함부로 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돌아올 때는 우리가 평소 소중하게 여기는 금으로도, 육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사용하는 물과 전기 대해서도 한번쯤은 감사를 느끼고 아껴 쓰려 노력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 서광주교당 교수〉

기고

지방문화원장은 표준정관 지켜야 한다



강명보

구의 모 원장은 32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설문화원 형태로 운영했다. 당시 전국 문화원 대부분이 이와 같은 실정으로서 법 자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일부 문화단체에서 지방문화원 개혁 논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1994년 1월 지방문화원 진흥법, 1994년 6월 30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면서 기존 사단법인 지방문화원을 특수 법인으로 재인가하였으며, 새로운 법에 의해 광역, 특별시 자치구별 문화원 설립 인가를 통하여 오늘날 228개 시군구에 지방문화원이 있다.

아울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에 따라 연간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부는 문화원 발전에 장애가 된 원장의 장기 재임을 개선하고자 원장 임기 4년

연임 조항을 1회 증임으로 개정하여 원장의 장기 근속을 차단하였다.

1994년 시행 당시 오프동안 연임해왔던 문화원장들이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지방문화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특수법인으로서 지역문화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설득하여 원장 임기 4년 1회 증임제도가 정착됐다.

그런데 올해 전북 2곳의 문화원과 대전의 문화원 1곳에서 문화원정관의 원장 임기를 4년,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을 두고 광주지의 일부 문화원이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소문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문화원장 대부분은 원장 임기 8년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역시 정관에 따라 4년 종임을 하고 원장직을 사퇴하였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원장 임기 연장을 목적으로 정관 개정을 한다면 공공적 특

수법인을 사유화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1세기 정보화 및 지방화와 함께 지방문화원이 처한 여건 및 제반 환경도 크게 변했으며 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문화원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보다 많은 인사들이 문화원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회원 영입에 적극 나서 주민 속에 문화원으로 성장하도록 지혜를 모을 때이다.

이와 같이 엄중한 때에 원장 임기 연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표준) 정관을 위반하고 정관 개정을 한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첫째, 국비와 지방비 지원 중단과 둘째, 자치구 소유 문화원사 환수 쟁째, 정부 훈포상 대상 제외 넷째,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사업비 중단 및 회원 제명을 제의한다.

끝으로 지난 6월 입시국회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발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정부는 지방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론 성과를 평가하여 문화원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지회장〉

운전 중엔 DMB 시청 안되도록 안전장치 했으면

어도 DMB나 DVD 시청은 안되도록 돼 있는 것이었다.

DMB나 DVD 기능은 정차 후 자동차 기어가 ‘P’ 모드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해당 브랜드의 국내 대리점에 문의를 했더니 본사(미국)의 판매 방침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운전 중 DMB 시청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차들은 어찌한가. 운행중

DMB시청은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도 DMB를 켜고 도심을 질주한다.

외제차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DMB를 시청하며 질주하는 우리 운전자들

과 그걸 기계적으로 허용해주는 차량, 안전 차원에서 외국의 이런 철저한 안전의식과 기계적인 안전장치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호남권 ‘분열’ 아닌 ‘상생’으로 거듭나야

호남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간의 지역 이기주의에,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마찰이 빚어지면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발전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공모를 거쳐 2년 임기의 사무총장은 선임했으나 전북의 반발로 인해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 2년 단위로 사무국 위치와 대표 지자체를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 이어 전북도가 이를 반기부터 대표 지자체가 된 광주·전남·전북의 사무총장 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광주시와 전북도는 전북이 함께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올 들어 새만금사업, 과학비즈니스밸트 후보지 신청 등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광주·전남과 엇박자를 보였다. 과학밸트 유치문제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북은 독자적으로 새만금지역 유치를 선언해 갈등의 골을 키웠다.

여기에서 사무총장 선임문제로 ‘감정 다툼’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전남과 전북 간 분열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호남권 내분은 주요 국책사업 제외 등 호남에 대한 정부의 소외 정책이 계속되고, 광역경계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호남은 인구나 경제 규모,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영남에 뒤쳐 있고 충청권에도 이미 주주당했다. 이런 현실에 호남권이 분단에 훈성이 있다면 성장 추진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광주시장과 전남·북 지사가 만나 협심단회하게 토론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등 정치권도 호남이 실질적인 뿐 아니라 민족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형평성’ 잃은 광주 U대회 경기장 배정 기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신설 경기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대학 간 관리운영 협약 요건이 서로 달라 협정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체육행사가 경기장 선정부터 막걸이로 불거져 성공 개최에 차질을 빚어온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광주시는 광주 신설 경기장 입지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체육시설 부지 무상 제공, 지상권 설정, 관리운영비 부담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육관과 수영장 경기장 입지를 각각 신청한 광주여대와 남부대는 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해 배정됐다.

하지만, 체육관과 수영장, 양궁장 등을 신청한 조선대는 관리운영비를 시가 전액 부담하고, 지상권 설정 또한 시가 5년 이후 기부 체납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부지 무상 제공도 광주여대가 끝수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U대회 신설 경기장에 대해 대회가 끝난 후 운영방안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 무엇보다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서부터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32세인 정모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를 졸업한 후 30여 차례 취업문을 노크했지만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 선배의 알선으로 번역 일감이 생기면 그때 도와주고 많지 않은 돈을 받고 있다. 수입이 일정치 않다보니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같은 나이인 강모(여)씨는 7년차 은